

서
평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를 읽고

손호철, 서강대학교출판부(2017)

오세제 _서강대학교

1. 글머리에

먼저 손호철 교수님의 저서에 대한 서평을 쓰게 되어 후학으로서 영광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는 61년체제라는 박정희 신화, 87년체제라는 민주항쟁, 97년체제라는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를 살펴보고, 그 역사가 초래한 헬조선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 2017년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역사적인 11월 시민혁명의 주역인 1,600만 촛불시민들은 묻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 박정희 신화는 물질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87년 민주항쟁을 거치고도 우리 민주주의는 왜 이리 허약한가? 정권의 교

체와 함께 97년 신자유주의체제는 끝나는 것인가?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손호철 서강대학교 교수의 대답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받은 느낌은 한 진보적 정치학자가 일생동안 해왔던 이론적 고투의 결과를 엮기스만 모아 정리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 사회과학자들도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연구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저자의 치열함은 같은 길에 있는 후배들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아울러 일반 독자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일관되고 자신감에 찬 글이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11월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는가를 체제론적 시각에서 61년체제, 87년체제, 97년체제와 관련시켜 분석하고 대안인 2017년 체제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2부는 체제란 무엇이며, 우리는 여전히 87년체제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97년 체제에 살고 있는지 등의 논쟁적인 이론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손호철 교수의 삶을 압축해 소개하면, 화가를 꿈꾸다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해 운동권이 되는 바람에 8년 만에 졸업을 한다. 동양통신 기자로 일하던 중 광주학살에 대한 언론 검열에 저항해 제작 거부운동을 벌이다 유학을 떠났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치연구회장, 진보학술동인지 『이론』 대표, 민주노동당 정치위원회 자문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진보평론』 공동대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회장, 정의당 연구소인 미래정치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력만 보아도 그가 골목진 한국 현대사에서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도 함께해온 것을 알 수 있다.

2. 박정희 신화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저자는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시간을 단기지속, 중기지속, 장기지속으로 나누고 이것을 각각 사건사, 복합국면사, 구조사로 이론화한 바 있다고 소개한다(손호철 2017, 21 이하 페이지만 표시). 그리고 11월 시민혁명을 이런 이론 체계에 입각해 체제론 차원에서 분석한다. 표층인 사건사 면에는 박근혜 게이트가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최태민으로부터 이어진 유사 사마니즘적 고조선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박근혜게이트는 박정희체제의 문제라고 본다. 중간 수준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불완전한 민주화를 특징으로 하는 87년(헌정)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심층에는 97년 신자유주의체제가 작동하고 있다(23). 시간적 선후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심층적 원인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저자는 아직도 87년체제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1997년 이후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색맹 사회과학’이라고 비판한다. 청년 실업 등 헬조선이 87년체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한다. 87년 이루어

진 헌정체제가 아직 유효하지만 97년 신자유주의체제의 하위체제라는 것이다(25). 저자는 먼저 박정희 신화를 걷어내기 위해서 경제성장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들추어낸다. 사회적 양극화를 필두로 하여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 노인 빈곤율 최고와 삶의 만족도 최저 등등 어두운 지표들은 끝이 없다. 고도성장이 개발 독재나 유교 때문이라는 해설은 모두 반증을 통해 부정되었다. 저자는 새롭게 농지 개혁을 통한 지주계급의 몰락과 냉전, 그리고 분단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31-33).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쟁의 쇼케이스가 된 특수한 조건이 미국의 집중 지원을 강제하여 고성장을 이룩했다는 분석이다. 박정희 신화 이전에 이런 구조적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결국 박정희 때문에 이룬 경제성장이 아니라 박정희 임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장이란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모델을 모방한 고도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내포적 산업화 단계에서 한계에 부딪친다는 점과 마지막에는 그가 경제운영에 실패해 그 결과로 죽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또 박정희 신화가 다음 열거하는 두 가지 물질 기반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첫째, 농지 개혁과 냉전의 덕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나아진 생활에 대한 체험, 둘째, 97년 민주정부가 집권한 이후 경험한 유례 없는 양극화가 초래한 서민들의 고통이다(38).

저자는 97년체제에 대한 설명에서 소위 민주정부라고 칭하는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한다. 1997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이름하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경제민주

주의와 분배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민주화(87년체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97년체제)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군사독재정권보다도 더 양극화를 심화시킨 반서민 정권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한국 자유주의의 비극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이명박과 보수 세력의 압승 원인(54-55)이다. 그래서 1997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김대중 후보를 찍었으나 2007년 대선에는 이명박 후보를 찍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 비하면 자유주의 정권들은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도 성과를 거둔 양호한 정부였지만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반면 이후의 보수 정부들은 민주주의도 후퇴시키고 성장도 못하고 양극화도 심화시켜 헬조선을 만들었다. 자유주의 정부는 최소한 감세는 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는 부자 감세까지 감행한 우파신자유주의 정부였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남북관계도 적대적 대립 관계로 회귀시켰다(59).

3. 2017년 체제를 그리며

저자는 2013년체제론이 주관적 희망 사항이었다면 2017년체제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위대한 11월 시민혁명은 박근혜 퇴진이나 정권교체를 넘어 헬조선의 탈피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67)고 한다. 최소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야만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북유럽과 같은 복지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 정치권이 주장하는 제7공화국이 아니라 시민의 바람에 기초한 ‘제2공화국’이라고 주장한다(77-78).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공화국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본권의 강화, 둘째, 내각제, 남한연방제 등 권력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한 고민(79). 셋째, 직접 민주주의의 극대화(81)다. 그러나 국민소환과 시민발안제, 주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얘기하면서도 추천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법원의 배심원 추천제와 녹색당 대의원 추천제 등에서 검증된 추천제는 결코 엘리트들에 국한된 대의제보다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

또한 내각제(더 정확히는 의회중심제)(80)에 대해서 저자는 승자 독식의 다수결 민주주의 대신 유럽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내각제라는 합의민주주의, 협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점은 아직도 대부분의 자유주의 정치인들도 4년 중임 대통령제(혹은 결선투표제)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진보적 학자로서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그 현실적 판단 근거로서 지금의 다당체제를 지적한다. 지난 5월 19일 야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담에서 문제인 대통령의 개헌 발언 가운데 나온 선거법 언급을 감안한다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은 현재의 다당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비례대표를 강화하고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켜 사표를 극소화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주장한다(86-88). 둘 다 지극히 온당한 주장이다.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함께 안철수·유승민 후보가 오히려 줄어지는 포퓰리즘적 발언을 했던 의원 정수의 확대까지 정면 돌파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문제는 복지국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중세 문제처럼 학계와 시민사회가 주도하지 않으면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이 주장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보다 근본적인 요소로 저자는 정당 개혁(90)을 이야기한다. 특히 초계급적인 지역연합에 기초한 한국의 정당들은 보수 지역 정당이어서 다양한 사회세력을 대표하지 못한다. 결국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엄존하는 중대한 갈등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의의 실패'가 '거리 정치의 일상화'로 나타나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해 '한국예외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진보 정당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더욱 노무현 정권 당시 자유주의 세력이 보수주의 세력과 손잡고 한미 FTA를 추진하고 노동법 날치기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제를 전면화시키고 쌍용자동차를 해외 매각한 사실을 아프게 적시한다. 그래서 더욱 촛불 시민이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정치라는 결론에 다시 도달하게 된다.

97년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 찾기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이며, 그 발전 위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고 변명한다(98)고 본다. 저자는 참여정부 시절의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였고, 권위주의 타파에 매달린 것이 참여정부의 비극이라고 본다. 또한 민주정부의 근본적 한계는 그들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반노동성(99)이라고 본다. 결국 노동 없는 민주주의, 노동 없는 복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IMF 경제 위기에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했는가? 그렇지 않다. 대안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101)고 본다. 이갑용 당시 민노총 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캉드쉬(Michel Camdessus) IMF 총재는 정리해고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스스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에 따라 도입했다는 것이다(102). 참여연대가 주도했던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성찰한다. 재벌의 횡포는 견제해야 되지만 진보적이지도 않은 외국 투기자본의 배만 불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103-104). 오히려 재벌 개혁의 방안은 민주정부 때 공약이었던 노동자 경영참여가 아닌가? 노동자 이사제를 넘어 작업 현장의 민주화를 포함해 산업민주주의가 도입될 때 생산성도 높아진다. 국민연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벌기업의 전횡을 제어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 노력한다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105). 비효율적인 공

기업에 대한 대안은 공공성을 포기한 사유화가 아니라 공공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익이사회를 구성하여 공기업의 개혁과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106-107).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이다. 규제 완화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생태와 환경, 공공성과 공공서비스를 희생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다. 저자는 대안으로 민주적인 사회적 통제(108)를 제시한다. 이윤만 생각하는 자본과 시장을 사회가 어떻게 민주적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성을 앞세우고 정치를 앞세워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만든 서구 사민주의의 길이 아닌가?

저자는 탈신자유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자유주의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걱정한다. 야권은 2016년 12월 헬조선에 대한 광장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여소야대였음에도 헬조선 극복을 위해 약속해온 법인세 인상을 포기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대로 간다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헬조선은 계속될 것이고 탈신자유주의 구상은 광장과 진보적 단체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113). 저자는 자유주의 정당에 먼저 과거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솔직하고 공개적인 자아비판과 반성을 촉구한다. ‘노동 없는 복지’ 노선도 넘어서라고 요구한다. 진정 중요한 것은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새로운 공화국의 건설이다. 2017년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은 결국 촛불 시민이고 광장이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촛불 시민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2017년 체제가 만들어질 지는 불

확실하다고 전망한다(118).

이 책에는 저자의 현실 정치에 대한 우려가 깊게 배어 있다. 냉전 수구 세력이 아닌 제대로 된 보수가 정립되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히 표현(119)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패권적 태도를 버리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호남과 친노를 대표하는 세력이 힘을 합칠 것을 제안한다. 지역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균열 구조가 필요하다고 세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촉구(122)한다.

계급 형성의 지체와 낮은 노조 조직률, 과도하게 커진 비정규직 등 전통적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진보 정당의 정치 환경은 심각하다. 진보 정치의 위기 극복 방안은 복구 사민주의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사민당이 주도하여 이끈 복지국가에로의 경로와 다를 것이다. 그와 다른 조건(특히 전쟁과 분단)의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계급의 동력이 취약하다면 젊은 세대와 진화하는 진보 이념을 중심으로, 즉 정치를 무기로 돌파해야 한다. 계급 균열의 빈자리는 세대와 이념 균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청년 정치’와 같은 의제가 긴급하지 않을까? ‘20대 보통 청년 500인의 지방선거 도전기’ 같은 이벤트성 캠페인도 벌이고 지역구마다 기초의회에 ‘2030 청년 성별 2명 공천 의무화’ 같은 할당제도 도입하고 청년 정치 교육도 일찍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등 눈에 보이는 ‘정치적 호명’을 해야 한다. ‘정치 =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년정치=지방의회 진출’이란 개념을 진보 정치가 주도해 만들어 나가야 진보 정

당이 산다.

저자는 진보 정당에 대해서도 충고한다(122-123). 지금까지의 실패를 인정하고, 밑바닥부터 새롭게 21세기형 진보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러기 위한 원칙은 첫째, 북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노동, 생태, 평화, 페미니즘을 아우르는 무지개 연합 정당이어야 한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운동과 결합하고 지역에 뿌리내려야 한다. 넷째, 활동가들이 대중 정치인을 지지하고 대중 정치인들이 당원과 대중의 지지를 확대 재생산해 당이 선순환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저자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충고를 한다.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절실한 이해관계의 비정규직이 나서서 산별노조운동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지역운동, 부문운동과 결합하는 노동운동, 노동자정치운동을 고민하는 노동운동, 청년실업을 겨안고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넘어서는 노동운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126). 그런 힘들이 모여 11월 시민혁명을 성공한 혁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28).

4. 한국사회, 87년체제인가 97년체제인가?

의미 있는 학술적 논쟁이 드문 한국의 사회과학 현실에서 그나마

논쟁이 형성된 것이 바로 87년체제론이다. 저자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논쟁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론적 쟁점들을 사회체계(social system)와 부분 체제들(partial regimes)이란 문제의식에서 살펴본다. 이 책은 한국의 현재 사회체제는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생겨난 97년체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133). 몇 가지 전제를 보면, 첫째, 저자는 한국 사회 전체를 추상화시킨 한국사회 모든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 체계로서의 한국의 사회체제 혹은 사회구성체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둘째, 열린 총체성으로서의 한국 사회체제와 별도로 슈미터(Schmitter 1992)가 이야기한 다양한 하위체제들 내지 부분 체제들이 존재한다(135). 셋째, 서로 다른 지평들 간의 단순-복합의 문제이다. 밥 제습(Jessop 1990)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체제들은 환원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지평들 간의 접합의 방법으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136).

여러 학자들이 지금도 87년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총체적 사회체제로서 87년체제가 아직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137). 김종엽(2005)은 우리 사회체제를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근거는 헌정적 통일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를 넘어 정치와 경제라는 두 축을 겹쳐서 87년체제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87년체제가 부분 체제를 넘어 총체적 사회체제라는 얘기고 현재도 87년체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의 문제제기는 1987년이 질적 전환점이었느냐보다 1987년 이후 질적 전환의 계기가 없

었느냐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만 아직도 87년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자는 1997년에 질적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가 그것이다. 브루스 커밍스(1998)가 한국에서 199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를 발전국가에 의한 ‘후발 발전모형의 종언’이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138).

87년체제론에 대한 후속 논쟁에서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났다. 첫째, 87년체제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61년체제와 97년체제만이 체제의 성격을 갖고 87년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정일준 2007)는 입장이다. 1987년에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7년에야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박정희의 국가주도형 경제체제에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호기(2009) 역시 유사한 입장이다. 다른 입장은 조희연이다. 97년체제의 등장을 주장하지만 87년체제의 하위체제라는 것이다. 97년체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야당 정권의 수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전자는 1997년의 질적 전환의 의미를 밝힌 공이 있으나 사회체제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두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보지 않고 경제체제로 환원시키는 경제주의라면, 후자는 정치체제를 특권화하는 정치주의라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조희연은 김종엽과 달리 97년체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면은 진일보했으나 정치적 변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1997년의 경제체제의 전환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주의라고 본다. 97년체제는 발전국가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에 의해 87년체제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139-140). 저자는 1997년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난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사회적 양극화 같은 근본적 변화를 뻔히 바라보면서 한국의 사회체계가 아직도 87년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눈먼 사회과학이라고 비판한다. 한국의 경제체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97년체제 이전에 3.2%에 불과했던 외국인 주식보유가 그 이후 40%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 보여준다고 한다(141). 그러나 헌정 체제, 정치 균열 체제 등 다양한 부분 체제로서 87년체제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한다. 사회체제라는 점에서도 97년체제의 정치체제 부분이 불완전한 민주화라는 87년체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97년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142).

저자는 한국의 사회체제(136-149)와 부분 체제(150-160)에 대해 그림까지 덧붙여 친절하게 설명한다. 사회운동체제(159-161)에 대한 설명에는 2002년 촛불체제에서 2016년 11월 시민혁명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역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고가 된 탓일 것이다. 이런 문제는 2장의 논쟁 중에도 등장한다. 한국사회의 정치 균열 구조에 대한 <그림 2>(170)는 이명박 정부 당시를 기준으로 그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97년체제론은 경제주의적인가?

그간의 논쟁 과정에서 저자는 조희연, 서영표가 자신의 글을 잘못 이해했다고 보기에 체제론에 관한 본격 저작인 이 책에서는 자신의 주장(166-170)과 조희연, 서영표의 반론(171-175)을 테제별로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먼저 사회체제와 부분 체제를 분리해 독립적인 하위체제로 분석한 것을 복합체로서의 사회체제를 분석하지 못했다고 조희연이 비판한 데 대해서 인정하고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작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176-178). 둘째, 앞부분의 경제주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뒷부분(저자의 97년체제 중심론이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현실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동의한다(179). 저자는 이후 연구를 통해 그 같은 작업을 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너무 추상적인 분석에 머물러 구체적인 정세적 계기와 일상적 정치 공간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대안적 공동체운동에 주목하고(서영표), 반신자유주의 세력이 국민적-대중적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헤게모니 전략이 필요하다(조희연)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세에 대한 구체 분석은 다른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본다.

논쟁에서 저자가 수긍할 수 없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87년체제, 97년체제, 08년체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체제라는 주장이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1987년은 정치적 계기가 두드러졌고, 1997년은 경제적 계기가 두드러졌다. 저자는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들이란 계

기를 전제로 삼아 연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87년체제를 정치체제로 보는 사람은 조희연과 서영표뿐이라고 한다. 누구나 체제를 정치 경제체제의 복합체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도 그들이 사용하는 정치 레짐이라는 개념은 국가 형태나 유형보다 낮은 정부 형태나 정권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회체제와는 추상성이 다른 것으로서 이론적 대안들이 되지 못한다(181-183). 또 87년 이후 경제체제는 모두 신자유주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장기적 경제변동의 추세는 1970년대 말부터 중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관철되도록 정해져 있었고, 1987년, 1997년 같은 정치적 계기들이 이를 드러내줄 뿐이라는 주장은 구조결정론이라는 것이다. 표면적 정치주의 아래 심층적인 경제주의 내지 구조결정론이라는 것이다(184-185).

저자는 87년체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 먼저 조희연과 서영표는 한국에서 70년대 말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었고 5.18광주항쟁은 이에 대한 저항이라고 조지 카치아피카스(2005)를 인용했다. 저자 역시 신자유주의의 효시는 박정희 정권이 1979년 도입한 경제안정화정책이고, 윤소영(1999)도 부마항쟁이 최초의 반신자유주의 항쟁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렇다고 해서 1979-1980년대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 저자는 87년체제를 과거의 발전국가에서 약화된 발전국가로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발전국가는 약화되고 신자유주의는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즉 경제체제의 변화도 주목했으나 이 변화는 1997년과 같은 체제 변화의 수준이 아니라 발전국가 내에서

의 정세적 변화였다고 한다. 따라서 1987년에는 정치적 변화가 유기적 변화의 수준이었고 여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것이다(188-189). 두 번째, 조희연과 서영표는 1987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이라고 한다. 손호철은 저항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 경제체제가 발전국가라는 사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그런 논의는 경제체제가 아니라 사회운동체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완화된 발전국가가 되었다고 했으나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같은 질적 전환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190-191). 셋째, 87년-97년 관계론이다. 저자는 왜 아직도 87년체제론을 주장하는지 이해 못 한다. 조희연은 '왜 진보적 사회과학에서 87년체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가'라고 묻고 있으나 저자가 부정하는 것은 87년체제의 현재성이다. 사회체제론은 현재적 규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지 역사적 규정성을 보려는 것은 아니다(191-193).

97년체제론에 대해 정리한다. 저자는 정치체제의 변화수준은 1987년의 변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변화였기에 97년체제는 정치체제의 경우 87년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 것이다. 조희연처럼 정치 변화의 수준을 집권 세력의 교체에서 찾을 경우 97년체제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니 정치적으로도 질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도구주의 국가론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나아가 97년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질적 변화라고 조희연과 서영표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문한다. 결론적으로 97년의 경제적 변화는 유기적 변화였다면, 정치적 변화는 정세

적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195-197). 마지막으로 08년체제 등장과 관련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때문에 실패했다는 최장집, 손호철 류의 신자유주의 환원론적 설명을 넘어서야 한다는 조희연의 주장이다. 저자는 이를 신자유주의 중심적 설명이지만 환원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198-199).

저자는 08년체제론과 전략의 문제를 함께 생각한다. 08년체제를 97년체제의 하위체제로 파악한 저자의 주장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동일시했다고 보는 것은 조희연과 서영표가 이 정권들 사이의 연속성에는 눈을 감고 단절성만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입증해준다고 본다(200-201). 저자는 이승원(2009)을 인용해 반신자유주의와 ‘반MB’의 문제를 단순히 진보 정당 지지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냐의 문제로 사고하는 경향이 진보 진영 내에 존재해왔다고 한다(206). 저자는 구체성을 결여한 관념성을 진보 진영의 문제로 지적하는데, 상당수가 이 관념성을 급진성과 혼동해 관념성은 그대로 지닌 채 우경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헤게모니전략의 유연성도 우경화로 혼동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208). 이 지점에서 논쟁은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로 접어든다.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서술적 풍부함이 인상주의적 서술을 과학적 분석으로 혼동하는 ‘사회학적 서술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밀도 있는 서술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론적 분석으로 혼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6. 마치며

기존의 역사는 다수파가 주도하는 특정한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다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평가하게 된다. 저자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진보 세력 내부의 다수파가 걸어왔던 자유주의 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아직까지 진보 정당이 교섭단체조차 만들지 못하는 힘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그 근거에는 민주대연합이란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때에 따라 이 주장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변주를 한다. 몇 년 전에는 빅 텐트론이라고도 했다. 저자의 체제론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속에 화해하기 어려운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게 만든다. 진보 정당과 보수 야당의 양자택일적 선택 구도는 논쟁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저자는 경계했지만 현실은 상당히 단순하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소수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자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이 책에서 발견하듯이 이론적으로는 이미 압도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 속의 힘은 취약하다. 현실의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지난한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게 필수적이다. 저자는 그런 점에서 일관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 세력에 방향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문적 기여 말고도 현실에 주는 도움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